



## EU 25개국, 신재정협약에 공식 서명

채원영 연구원

- 벨기에 현지시간 3월 2일에 EU 27개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정협약에 서명하였음.
- 신재정협약은 유로존 채무위기의 핵심 원인인 방만한 재정운용과 그로 인한 과도한 국가부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의 재정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  -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차기연도 예산(안)을 사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받은 나라와 위험국가에 대한 재정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.
  - 기존 유럽안정·성장 협약(SGP)에 규정된 황금률대로 누적 공공채무는 GDP의 60%, 당해 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3%를 넘지 못함.
  - 이외는 별도로 부채 상환이자 부담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0.5%까지 인정되며 누적 공공부채가 GDP의 60% 미만인 재정 건전국의 경우 구조적 재정적자가 1%까지 인정됨.
  - 특정국이 황금률에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시정절차가 시작되어 해당국은 부채 감축과 재정적자 등에 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고 이행해야 함.
  - 특히 당해 연도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%가 넘는다고 EU 집행위원회가 판정하면 벌과금 부과 등 제재절차가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황금률을 위반한 국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회원국 전체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됨.
  - 신재정협약은 EU각국에 신재정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자국 헌법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.

■ ■ 협약의 최종 발효는 신재정협약에 서명한 25개국의 의회비준 이후 2013년부터 이뤄질 예정임.

- 영국은 당초부터 협약 가입을 거부했었고, 체코의 경우 의회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음.
- 따라서 신재정협약은 27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형태가 되지 못하고 원하는 국가끼리만 맺는 협약이 되었음.
- 협약의 발효는 조약 비준국이 12개국을 넘으면 시작되며 신재정협약에 서명한 25개국 가운데 24개국은 자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되고 아일랜드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있음.

■ ■ EU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신재정협약 서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.

- 전문가들은 EU가 신재정협약을 통해 ‘통화동맹’에서 ‘재정 동맹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음.
- Rompuy EU 정상회의 의장은 “이 협약은 우리 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EU는 궁극적으로 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”이라고 언급하였음.
- 독일 Merkel 총리는 “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미래로 나아가는 EU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”이라고 언급하였음.
- 프랑스 Sarkozy 대통령은 “재정위기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으며, 이는 성과를 거둘 것”이라고 언급하였음.

(Bloomberg, WSJ 등, 3/5)